

공 개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4. 13. (제 7 차)

의
결
사
항

(주)에이치에스애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4. 13.

1. 의결주문

(주)에이치에스애드의 제9기(2012.1.1.~2012.12.31.)부터 제15기(2018.1.1.~2018.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별지1](#)과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에이치에스애드의 제9기(2012.1.1.~2012.12.31.)부터 제15기(2018.1.1.~2018.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치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안
(주)에이치에스애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1,248.8백만원
OO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징금 78.7백만원

나. 위반내용

① (주)에이치에스애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

- 회사는 제9기('12.1.1.~'12.12.31.)부터 제15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12년 31,145백만원, ’13년 34,271백만원, ’14년 35,565백만원, ’15년 41,755백만원, ’16년 44,916백만원, ’17년 47,683백만원, ’18년 53,511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자금 및 회계처리 담당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OO회계법인**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 >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회사의 제9기(’12.1.1.~’12.12.31.)부터 제15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2년 31,145백만원, ’13년 34,271백만원, ’14년 35,565백만원, ’15년 41,755백만원, ’16년 44,916백만원, ’17년 47,683백만원, ’18년 53,511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횡령발생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2022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22.2.23.)

다. 관계법규(붙임)

(별지1)

(주)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에이치에스애드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 000, 0000000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주)에이치에스애드에 과징금 1,248,8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에이치에스애드(이하 '회사')는 제9기('12.1.1.~'12.12.31.)부터 제15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12년 31,145백만원, '13년 34,271백만원, '14년 35,565백만원, '15년 41,755백만원, '16년 44,916백만원, '17년 47,683백만원, '18년 53,511백만원)

- 회사는 제9기('12.1.1.~'12.12.31.)부터 제15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 자금 및 회계처리 담당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32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42

-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고, 차액으로 결재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

(별지2)

OO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 000, 000 000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과징금 78,7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에이치에스애드(이하 '회사')의 제9기('12.1.1.~'12.12.31.)부터 제15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12년 31,145백만원, '13년 34,271백만원, '14년 35,565백만원, '15년 41,755백만원, '16년 44,916백만원, '17년 47,683백만원, '18년 53,511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는 제9기('12.1.1.~'12.12.31.)부터 제15기('18.1.1.~'1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 횡령발생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하거나, 조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경고, 주의,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하거나,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주의,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붙임)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등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⑧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방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시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 ⑦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 ⑤ <생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 7. <생략>

② <생략>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생 략>

③ ~ ⑧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생 략>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5. <생 략>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 22.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 략>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 4. <생 략>
- ② ~ ③ <생 략>

제51조(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 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 다. <생략>
3. ~ 8. <생략>
- ② ~ ⑧ <생략>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 ⑧ <생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생략>
-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⑦ <생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표 7] 조치등의 기준

1. ~ 2. <생 략>

3. 조치등의 가중·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생 략>

나. 감경사유

1) ~ 4) <생 략>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 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등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 9) <생 략>

4. ~ 5. <생 략>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

1. ~ 2. <생 략>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생 략>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생 략>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생 략>

4.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 관련 적용방안 보고 일부 발췌 (증선위, '20.4.22.)

4. 기본과징금 가중·감경 비율 구체화

- (적용방안) 위법행위 발생 빈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사유별 경중을 따져 아래와 같이 가중·감경 비율을 특정하여 적용하되, 추후 실제 사례가 축적되면 필요시 비율 조정

- 사유별 가중 비율

(단위 : 기본과징금의 비율)

가중 사유	규정상 한도*	가중 비율
① 과실 위반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	합계 50%	10%
② 고의·중과실 위반 조치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		20%
③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 초과(고의 위반)		30%
④ 위법행위를 은폐·축소하려고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30%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20%	20%
⑥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	기준금액의 10% - 기본과징금 (50% 이하)	좌동
⑦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50%	50% 이내 합리적 금액

* 전체 가중 한도 50%(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 1 1. 과징금 산정방법)

- 사유별 감경 비율

(단위 : 기본과징금의 비율)

감면 사유	규정상 한도	감경 비율
①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규모가 1,000억원 미만(상장(예정 포함),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제외)	합계 50%	30%
② 감사인 감리/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		20%
③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		50%
④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증선위 신고 또는 감사인 등에게 고지한 경우		30%
⑤ 회사가 감라심사 전 수정공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합계 30%	30%
⑥ 회사가 감라 후 1개월 이내 수정공시한 경우		20%
⑦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등을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좌동
⑧ 위반자의 부담능력, 취득이익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⑨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⑩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 예상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와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 <생 략>

II. 일반원칙

1. <생 략>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되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이사(가)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 <생략>

II. 일반원칙

1. <생략>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되 다음 가.부터 차.까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이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바. ~ 차. <생 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생략>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생략>

④ ~ ⑥ <생략>

제170조(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3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 <생략>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 다. <생략>

3. <생략>

③ ~ ⑥ <생략>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 다.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생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삭제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사항
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제1032호(금융상품 : 표시)

4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 (2)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기준 (이 감사기준서를 포함한 전체 감사기준서를 총칭하여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전반적인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특히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한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의 범위, 권위 및 구조를 설명하고, 감사기준의 준수 의무

등 모든 감사에 적용되는 독립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독립된 감사인은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 5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인이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5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16 (전문가적 판단)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 17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진행 중에 입수되는 모든 감사증거에 적용한다. 감사의 특정한 측면(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 특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입수되어야 하는 감사증거(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70), 감사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특정절차(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20),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감사기준서 200과 감사기준서 330)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11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청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더라도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내야 한다.
-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27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경우,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부문중요성을 사용한 부문재무정보의 감사
 - (b)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 (c)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 44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04